

로봇·방산 신규단지 조성 계획 이차전지 전주기 밸류체인 완결

산업부, 특화단지 신규 공모 개시
휴머노이드·항공엔진 중심 추진
기존 이차전지 단지와 연계 강화
내달 서울 설명회서 절차 등 안내
공모 2월 27일 마감, 2027년 지정

정부가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나선다. 신규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차전지 공급망을 전주기로 완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최종 지정은 2026년 하반기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 특화단지와 연계해 기초원료 생산까지 포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하는 공급망 완결형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청주·울산(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전극체·리사이클링)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주기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추가 지정에 나선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신속 처리되는 등 규제·행정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

가첨단전략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사업, 실증·시험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정책 금융 및 민간 합동 투자 연계 등 금융 지원도 집중된다.

신청 대상은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이다. 신청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전략산업 관련 기업 등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평가를 진행한 뒤,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이번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IS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풀어도 상한은 3%

교육부, 대학재정 악화 대응
국가장학금 II 유형 규제 2027년 폐지
AI·디지털 전환 등 혁신 재투자 요구

정부가 사립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과 연계된 일부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가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와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들은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등록금 인상 허용 범위와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의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지급하지 않던 국가장학금 II 유형 연계 규제가 2027년 폐지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2012년 도입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지급되

면서,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이 이어지며 재정 압박을 버티지 못한 대학들이 늘어났고, 올해는 전국 193개 대학 중 136개교(70.5%)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사립대의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연 668만원으로, 2011년보다 21.9%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 방침을 공식 환영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대교협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규제 개선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 회장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등록금 책정 △법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소통 △AI·디지털 전환과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교육혁신 분야에의 재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대학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돼, 인상 폭은 약 3%대에 그칠 전망이다.

사립대 한 고위 관계자는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자재 투자나 우수 교원 확보를 고려하면 3% 이상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최다’

공정위, 유통 납품업체 실태 발표
정보제공수수료, 우회 마진가능 지적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정보제공수수료를 둘러싼 납품업체들의 불만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개 유통업체,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전년대비 3.5%p 상승했다. 편의점

(92.8%),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 등 대부분 업체에서 개선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전체 업체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고,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대금 지연지급(4.3%)이 뒤를 이었다. 다수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최상위 업체로 나타났으며,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피해 경험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품 노출이 축소되거나, 광고 강요를 통해 유통업체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내년에도 농산물유통 성과 기대”

농식품부, 농산물유통 혁신대전 개최
(주)미스터아빠·한반도농협 사례 공유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해, 그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주)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자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이윌,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석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

행사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대비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근거법 제정안이 이달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디지털처 신설로 전면적 AI전환 본격화

농어촌공사, KRC-AX 전략 수립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정부의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목표에 발맞춰 ‘KRC-AX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및 업무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AI 전환을 전담할 조직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기존 ‘디지털 혁신처’를 ‘AI 디지털처’로 개편해 AI 총괄 부서로 역할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공지능 정책 자문기구인 KRC-AI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AI 기술과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는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해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관리를 체계화한 ‘AI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30개 이상의 세분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업무 시스템 전반에 AI 적용도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